

2010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제언

박노동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지역복지정책의 체계는 2000년대 이후 4대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확립 등으로 그 기본 틀이 구축되어 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새로운 사회복지수요의 확대와 그에 따른 보편적 복지서비스로의 사회 정책의 변화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0년에도 예외 없이 이러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복지환경 및 정책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정책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복지재정수요의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졌고, 복지재정수요의 증대는 국가정책수립과 집행에서 정부예산집행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대전광역시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서비스공급방식에서 시장메커니즘의 이용, 즉 경쟁을 통한 능률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의 변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회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단체가 설계한 표준품질에 따라 민간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공급해 온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그동안의 복지서비스는 일방적이고 특정계층에 국한되어 있으며 시혜적인 특성을 갖는 서비스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복합적인 대인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충족되기 위해서는 지역민이 자신의 서비스를 직접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민 중심적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역민 중심적 복지정책으로의 변화는 사

회복지서비스가 특정계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보편적 복지로의 특성변화가 전개되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시설과 공급기관 중심의 표준화된 서비스들은 다양한 소비자계층의 선호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기관중심의 표준화된 서비스공급은 한편으로 서비스의 과잉공급 우려와 다른 한편으로 과소공급 우려라는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어 사회적 능률성의 실현에 효과적이지 못한 서비스전달체계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발 맞추어 민선4기의 대전광역시 복지정책의 성과를 재조명하고 2010년 복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대전광역시 여건 변화 및 복지환경의 전망

2.1 민선4기 복지분야 성과 및 2010 추진과제

대전광역시는 민선4기 동안 복지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역점사업들을 추진하여 왔다.

첫째, 차별이 없는 행복한 가족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였으며, 안정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하였다. 또한 노인 일자리, 저소득층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복지시설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광역시중 장수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은퇴후 정착하고 싶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장애인이 안심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기존 복지전달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개념 복지모델로 통합형 복지모델을 구상하여, 실행코자 하였다. 장애인의 기초생활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의료재활치료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장애인 이동불편을 경감함으로써, 장애인복지가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셋째,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력개발, 보육비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여성의 사회적 진출, 출산률이 동시에 확대되었다.

넷째, 5년 동안 무지개프로젝트로 총 8개동 대상, 140개 사업을 추진하여 관련 지역의 주거·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지역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희망메신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 객관적 지표로 나타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우선, 저출산정책에 따른 성과를 정리하면, 합계출산율이 2006년 1.15명에서 2007년 1.268명, 2008년 1.215명을 보이고 있으며,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2008년 전국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은 출산을 보이고 있다.

여성 취업역량강화사업 추진결과 매년 7,000여개의 여성일자리를 제공하였다. 2009년 10월 현재, 대전광역시 여성 고용률은 45.2%로 크게 높아졌다.

2006년 대비 2009년에 장애인복지예산은 83.2% 증가하였으며, 2010년 또한 64,813 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1.9% 대폭 증가하였다. 장애인일자리의 증가에 따라 2007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은 1.74%로 전국 최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처음으로 장애인복지공장, 권역별재활병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전국 장애인복지수준 평가결과 2년 연속 특·광역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노인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변모하였다. 2008년 평균수명 79.21세로 광역시 중 기대여명이 가장 높은 도시이며, 장수확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신개념 복지모델 '무지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취약지역의 주거·교육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살맛나는 공동체 복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대전광역시는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택·집중형 복지모델의 중심지가 되었다.

표 1
복지분야 성과지표

지표	단위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
· 무지개프로젝트추진사업	개	-	32	56	마무리
· 성별영향평가	개	4	14	141	150
· 여성 일자리 확대	명	6,500	7,169	7,419	7,500
· 지역아동센터 설치수	개소	14	26	143	150
· 보육료 수혜자	명	15,755	19,469	32,986	42,155
· 보육시설 수	개소	977	1,072	1,263	1,400
· 노인일자리 확대	명	1,008	2,400	6,123	6,268
· 노인생활시설	개소	33	38	52	56
· 장기요양보호시설	개소	-	60	104	122
· 노인인당복지비 확대	천원	331	406	980	1,080
· 생활안정지원자 수	명	16,000	17,000	21,800	26,000
· 장애인의무고용률	%	1.35	1.49	1.78	2.0
· 장애인일자리 확대	명	350	370	539	700
· 장애인복지시설	개소	53	59	79	85
· 공중보건의료기관(시설)	개소	20	20	21	22
· 예방접종자수	명	209,833	248,015	778,829	295,322

2010년에는 상기의 성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복지환경에 적합한 중점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평가인증보육시설이 500개 이상 늘어나며, 영유아보육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되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2010년 신축하여 새롭게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사업을 확대·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개최를 통한 상시 취업센터운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수 도시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복지공장을 준공·운영할 예정이며, 권역별 재활병원을 2011년에 개원할 계획이다.

또한 무지개프로젝트가 주민이 주도하는 신개념 복지모델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도시재생프로젝트로 확산되도록 시민의 복지의식과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대전광역시 2010년에도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나눔과 배려의 행복 복지도시 구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2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복지수요의 전망

사회복지욕구의 다양화와 계층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환경은 복지 비용에 대한 축소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미국발 경제위기가 우리사회에 여전히 악재로 작용하고, 그 여파가 지역사회에도 강력히 작용함에 따라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크며, 이는 복지 비용을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복지욕구는 다양화하고 있으며, 복지수요 또한 이에 대응하여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선 가족의 변화 추세에 따라 핵가족의 보편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족원 돌봄을 위한 전통적 가족기능 약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변화와 함께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기존의 공공중심에서 민관이 협력하면서 혹은 민간이 담당하는 역할이 강화되는 등 다양화되는 추세로 변모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좀더 복지자원의 활용과 서비스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맞춤형 복지, 일을 통한 능동적 복지 등이 복지모델로 정착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대전광역시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형편이다. 지역의 사회복지여건과 전망을 좀더 구체적으로 아래에 적시해보도록 한다.

우선, 2010년 대전광역시의 인구규모 및 복지수요의 변화에 대하여 예상해보면,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보호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구구성상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는 고령화의 여파로 증가할 예정이며 저출산에 따라 유년부양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

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창출시킬 것이며, 예기치 못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규모의 변천 흐름과 더불어 가족부양기능 약화로 인하여 노인·아동·장애인의 삶의 질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지속과 건강위험 및 식품안전 위해 요인 증가에 따라 피부양 인구의 증가, 유행성 질병 전파 경로 확산과 불량식품 발생 요인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2
대전광역시 인구구성의 변화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인구(명)	1,469,304	1,480,185	1,491,098	1,501,993	1,512,870
총부양비(%)	36.3	35.8	35.3	34.7	34.2
유년부양비(%)	26.7	25.8	24.9	24.0	23.2
노년부양비(%)	9.6	10.0	10.4	10.7	11.0
노령화지수(%)	35.9	38.9	41.9	44.6	47.3

23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으로의 전환

기존의 복지정책에서 복지관련 의사결정은 정부와 공급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방식의 전제는 전문화된 기관들이 취약하고 연약한 복지 수급권자들보다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관련 일들을 더 잘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공급자 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소비자 중심 접근이 부각되고 있다. 복지정책이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동시에 수동적인 수급권자가 아니라 자기 선호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가치가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바우처 방식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바우처를 통한 구매력 보전으로 시장의 유효수요가 형성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에서 제공기관이 생겨나게 되고, 특히, 그 과정에서 전략기획, 마케팅, 고객관리, 품질관리 등과 같은 경영활동을 통해 산업육성과 시장 일자리 확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정책적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렇듯 공급자 지원방식과는 달리 서비스 대상인원과 지리적 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고, 경영 수입에 대해 지자체가 회계감사의 통제 대신 자율 사용을 허용하면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영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장 유인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4 정부간 복지재정의 새로운 관계 정립 : 포괄보조(사회복지교부세)

복지정책의 주요 논점 중의 하나는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복지재정 기능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2010년에는 아마도 포괄보조가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모색할 때 재원운영방식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성과에 책임질 수 있는 포괄보조의 의의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보조는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 중 하나로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운영에 재량을 가지고 포괄적인 영역에 사용될 수 있게 법적 공식에 따라 배분되는 재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보조의 형식과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적인 형태를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형편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회복지교부세'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으로 복지관련 국고보조금은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지방에 지원되어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복지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교부세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수준으로의 복지인프라가 확충될 때까지는 국고보조금으로 환원하거나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하한 정부간 복지재정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 설정의 중심에는 복지업무추진 주체가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변화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로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25 복지정책 추진 여건(SWOT) 분석 및 그간의 정책 대응

대전광역시가 2010년 사회복지를 추진함에 있어 여건상 어떠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어떠한 전략을 취하여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강점요인으로는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양호하며, 고등인력의 거주비율이 타지역보다 높다는 점, 젊은층의 인구구성비율이 높으며, 관용과 포용의 주민의식(생활문화)이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강점요인을 극대화하여 향후 개발될 미개발 지역을 복지지향적으로 개발하고, 도시의 유통, 산업, 문화, 체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시설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환경으로 조성하는데 매우 유리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하여 약점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은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일자리 부족, 높은 청년실업률,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서비스 부족, 복

지 수용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소진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 중심의 능동적 복지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복지시설의 확충 및 균형적 배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사회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및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회요인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고양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급여성인력 생산성의 잠재적 가치가 우수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지역복지의 물적·제도적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제로 확대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협요인으로서는 고령화의 급속한 전개, 복지재정의 긴축,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 대응체계 미흡, 지역내 불균형 발전에 따른 갈등요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협요인을 극복하고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확보, 공적 노인부양체계의 확립, 민간복지자원과 사회복지 재정의 연차적 확충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림 1
대전광역시 복지계획 추진
SWOT 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환경, 주거 등 도시기반시설이 양호 ○ High Quality 인력의 거주비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젊은 층의 인구구성이 높은 도시 ○ 관용과 포용의 주민의식(생활문화)이 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일자리 부족, 높은 청년실업률 ○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시설 및 전문서비스 부족 ○ 복지 수용증대에 따른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소진도(Burn-out) 높음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서비스의 양적 증가, 질적 고양에 대한 시민요구 증대 ○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 고급여성인력 생산성의 잠재적 가치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의 도래 ○ 복지재정 긴축 ○ 맞춤형 복지서비스 전달 대응체계 미흡 ○ 지역내 불균형 발전에 따른 갈등

3. 2010년 지역사회복지의 비전 및 정책방향

3.1 정책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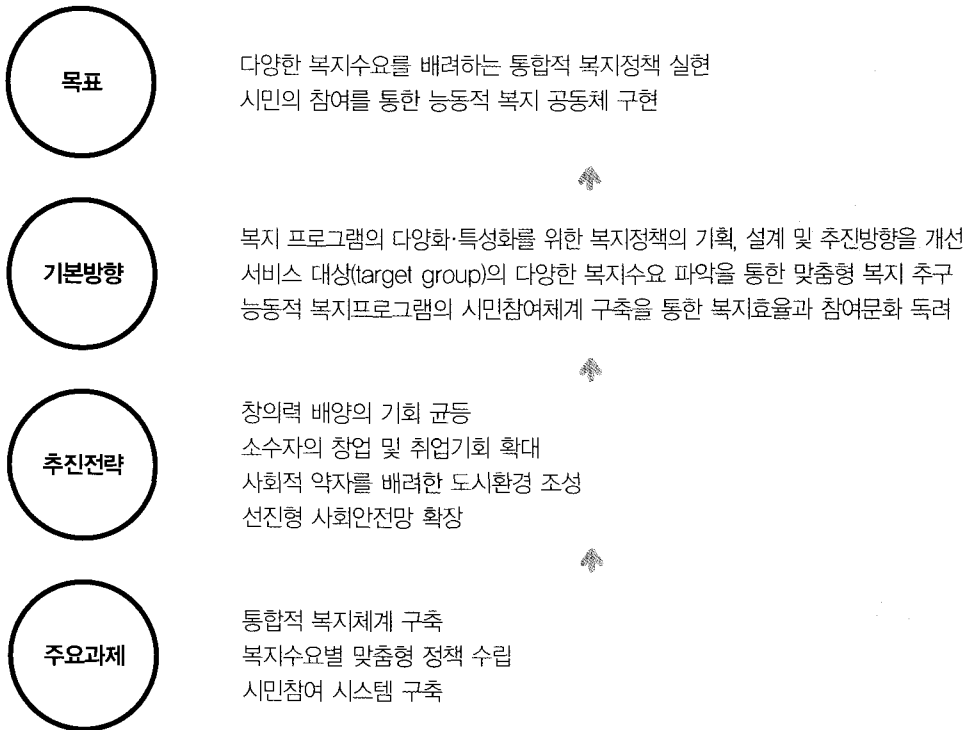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전광역시 2010년 복지분야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는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립복지의 달성이다.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서민 복지시책]을 추진하되, 일을 통해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자립복지]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 나눔의 복지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대전 복지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사회지도층과 취약계층간 [멘토-멘티] 연계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시민의 복지 욕구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의 수용성을 강화한다.

그림 2
“희망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
추진계획



넷째, 건강복지를 구현한다. 건강위협 및 식품안전 위해 요인 제로화 도시를 목표로 예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

위 4가지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고 2010년 현실적으로 가능한 복지분야의 비전을 “희망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으로 설정한다.

3.2 정책 추진 방향

위 비전의 구체화된 지향점임과 동시에 추진과제의 내용 및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비전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친서민복지]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빈곤층 생활안정, 자활일자리 확충, 희망키움뱅크제 등의 자립복지체계망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무지개 프로젝트 가속화와 민간연계의 나눔복지체계망을 구체화하도록 한다.

둘째, 계층별로 차별화된 [생활·현장 중심 맞춤형복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노인·아동·장애인·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맞춤형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며, 출산제고 로드맵에 의한 [자녀양육가정 + 일하는 여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셋째, 예방적 보건·식품안전 체계로 [시민건강복지]에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 전염병예방 강화, 식품제조유통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4. 2010년 분야별 역점 추진과제

2006년에 수립한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 틀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과제들을 역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2010년의 복지분야 비전인 “희망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대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영역별로 제시해보도록 한다.

4.1 희망기획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보장

2009년 10월 현재 대전광역시 기초생활 수급자는 24,729가구 48,450명으로 전체인

구 대비 3.2%로서 전국 평균 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점차 대상자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구별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구에 수급자들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어 특별교부금 차등지원 및 특정지역 선택·집중형 복지모델이 필요한 형편이다. 대전광역시에는 민선4기에 희망기획 [무지개프로젝트사업] 추진으로 집중 및 선택형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이 정착되어가고 있으며, 2010년에는 자생적 생활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와 재산액 인상 등 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및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 등 제도권 보호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의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별생계보조비 지급, 월동대책 보조 급여, 수급자 중·고생 교통비 지원, 차상위 계층 중·고생 교육비 지원을 현실화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 확대와 관련한 사업으로 영세자영업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확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장제비 등의 지원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둘째, 일자리를 통한 자활자립을 도모해 나가는 능동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시행해가도록 한다. 노동부, 공공기관, 기업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나가도록 한다. 또한 노숙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드림사업단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위기계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한 철저하고 탄력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무지개 프로젝트가 지역 중심의 취약동네 재생 및 지역중심 복지모델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후속사업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과 밀착한 사회복지관의 기능 내실화와 확대를 통하여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 무지개타운 건립, 무지개 프로젝트 대상지역 선정 및 지원, 민·관합동의 사회복지시설 보건·안전지킴이 추진, 교육·문화·복지의 다목적 시설인 공용복지회관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4.2 건강한 노인,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대전시 노인인구는 2009년 현재 119,222명으로 시 전체인구 대비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제도 미성숙 등으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대비가 부족하고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로 광범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

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노인들의 상당수가 건강 손실로 삶의 질 저하와 활동장애를 겪고 있어, 노인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는다면 노인의료비 급증 및 가족의 부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여가생활 또한 매우 소극적이며 활동성이 낮고, 다양한 노인세대 수요를 고려한 여가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건강한 노인,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활력있는 노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시책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노령연금 선정기준 완화로 지급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아파트 택배 사업 등 틈새직종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창업모델형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득증진 및 적극적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3 행복한 여성 건강한 가정 육성

대전광역시는 민선4기에 [이제는 가정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다양한 가족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양성평등 수범도시로서 성별영향평가 최우수도시 등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온 바 있다.

2010년에도 이러한 기초를 유지·확대해가야 하며,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증진으로 양성이 평등한 여성만족도시 구축,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건전 가족문화 확산 및 취약여성 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양성평등한 대전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여성 취·창업박람회 개최, 여성의 직업능력 및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을 확대 시행토록 해야 한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주부인턴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건강한 가족 문화 정착 사업을 확대하고,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힘을 써야 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 경제적 지원확대, 탈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센터 구축 운영 및 취약계층여성 보호에 적극 힘을 기울여야 한다.

44 아이와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조성

다음 세대인 아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방향을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 확대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공보육 실현,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두고, 관련된 다음의 사업을 역점 추진할 것을 제안 한다.

우선 아이가 행복한 보육 수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보육료 및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특수보육시설 확충, 보육센터 운영 내실화 등 보육환경 개선 및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행복마당 및 다동이 축제 등을 운영하며, 빈곤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갖기 사업을 전개한다.

청소년 역량강화와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존,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며, 청소년활동진흥센터·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5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현재 노후생활 보장에 있어 연금제도 미성숙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 대비가 부족하고 가족의 부양의식 약화로 광범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2007년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노년층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노인 복지를 구현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으로, 적극적인 노인 복지사업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10년에는 노인의 사회적 안정도모를 위한 소득지원 및 일자리 제공, 여가 문화 정착, 복지시설개선, 건강증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급확대, 노인일자리 전담 시니어 클럽 확대 지정,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증축,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경로당 등 노인 여가복지 시설 활성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및 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인건강증진사업의 현실화,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민간의 지역친화사업 활성화 사업,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공설화장장 및 편의시설 확충, 시범 자연장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다.

4.6 장애인이 살기좋은 복지도시 구현

장애인들이 대부분이 심각한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으며, 취업·창업 등 생계기반이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또한 장애발생에 대한 사후적 대처방안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장애발생 예방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0년 장애인복지사업의 기본 방향은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상담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관과 재활병원을 건립하여 급증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예방서비스를 강화하는 장애발생 제로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와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하여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운영,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복지공장 및 보호작업장을 건립 후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다. 또한 장애인 중심의 재활 및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추가적으로 건립하거나 이용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며, 의료재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장애아동 재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7 시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2009년은 신종플루로 지역내 의료체계의 신속한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시기였다. 2010년 시민 보건복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등 사전 검진실시로 환자 조기발견 및 타인 전염예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고품질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시설로 류마티스 및 퇴행성전문질환센터 건립, 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며, 시민 건강 증진 및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하여 예방접종 강화, 항바이러스제 확보 방안 등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질서 확립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4.8 식품안전과 위생 수준의 선진화

안락하고 편안한 접객서비스 제공으로 선진 국제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유통질서 확립 및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공중위생영업소 지도점검 및 자율지도를 홍보하고, 식품제조·강공 및 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책상황실을 운영토록 한다.

5. 결론

대전광역시가 2010년에 추진할 사회복지분야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안한 바에 따라 요약해보면, 사회적 안전망의 내실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확대, 사회복지인프라 구축 및 확충을 통해 인정이 넘치는 풍요로운 도시·행복한 대전 실현 '이라는 목표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정책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사회복지분야의 비전 및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추진 사업의 필요성, 정책추진의 우선순위의 적절성, 재원조달 가능성, 예상되는 정책성과의 달성정도 등이 될 것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선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와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정책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전광역시가 수요중심의 복지서비스 확충에 관한 정책추진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복지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시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할 책임성을 가지고 있다.